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조선시대의 의병(義兵)을 말할 때 첫째로 짚을 만한 의병장은 대체로 호남 출신이 가장 많다. 의병으로서의 진면목은 필연코 임진왜란 시절의 전투에 참여한 분들이니 김천일·고경명·김덕령 장군 같은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최고봉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말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이자 척사위정파의 효장이던 노사 기정진은 “의병장이란 난(亂)을 구하고 폭도들을 주벌(誅滅)함이다.(義兵本救亂誅暴之謂)”라고 말했다. 바로 김천일 장군의 문집에 서문으로 썼던 글에 나오는 말이다.

장성 출신으로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서 글을 배웠고 집안의 조카로 의병정신까지 배웠던 성재(省齋) 기삼연(奇參衍:1851~1908)은 임진왜란 이래 호남 의병장들의 뜻을 받아들여 한말 폭도들이

호남창의회맹소 대장 기삼연

왜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의병장이었다. 기정진의 손자로 한말 호남 의병을 최초로 일으킨 송사 기우만의 의진(義鎭)에 제일 먼저 합류했다. 기삼연은 선유대원들의 회유로 의병이 해산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켜 호남창의회맹소(湖南義興會盟所)라는 이름의 의병부대의 대장으로 추대되어 본격적인 전투를 했다. 그는 많은 왜군들의 목을 베기도 하며 의병으로서 의기가 높았지만 강한 왜군에게 이길 수가 없었고 끝내 전쟁에 패하여 붙들리는 신세가 되었다. 담양에서 기습 공격을 받아 체포된 기삼연은 광주로 붙들려 온 뒤 광주의 천변에서 총살을 당하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다.

최초의 항일 의병장 기우만은 초기 의병 전투에서 패한 뒤, 뒷날 ‘호남의사열전’(湖南義士列傳)이라는 글진 저술을 남겼다. 그 열전의 첫 번째로 오른 의병장이 바로 기삼연이었다. 호남의 대표적인 학문가로 많은 학자가 배출된 행주기씨여서 ‘가세유행’(家世儒行), 즉 대대로 유학에 종사한 집안 출신임을 밝히고, 젊은 시절부터 장부로 태어나 뜻을 펴지 못하고 집안에 누워 있다 죽어서 풀과 나무처럼 썩는다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의기가 당당했던 기삼연을 설

명해 주었다. 기우만은 또 말한다. “내가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키자 기삼연이 최초로 참여했으며 병법에도 밝아 백마를 타고 왕래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백마장군’이라고 호칭했다.” 그의 뛰어난 장군으로서의 지략까지 칭송한 것이다.

망국의 소식을 듣자 아편을 마시고 자결했던 애국자이자 큰 시인이던 매천 황현은 그의 ‘매천야록’에서 ‘호남 지방의 의병’이라는 제목 아래 “이때에 이석용(李錫庸)은 임실에서, 김태원(金泰元)은 함평에서, 기삼연은 장성에서, 문태수(文泰朱)는 무주에서, 고광순(高光海)은 동북에서 기의(起義)하여 일시에 바랍이 일 듯 일어났다”라고 말하여 1907년의 전라도 의병 활동을 말해 주었다. 기우만을 이은 호남의 의병운동은 기삼연에 이르러서 호남창의회맹소가 창립되어 모두 그 휘하에 모여 대대적인 왜군 섬멸의 작전을 펼 수 있었다. 뒷날의 학문가로 많은 학자가 배출된 행주기씨여서 ‘가세유행’(家世儒行), 즉 대대로 유학에 종사한 집안 출신임을 밝히고, 젊은 시절부터 장부로 태어나 뜻을 펴지 못하고 집안에 누워 있다 죽어서 풀과 나무처럼 썩는다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의기가 당당했던 기삼연을 설

들의 의기가 얼마나 높고 또 죽음을 불사한 의병 투쟁의 치열함을 읽고 나니 바야흐로 호남이 의항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있다. 임진왜란의 의병 투쟁은 당연히 호남이 주도했고 그 뒤로도 국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강렬하게 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호남 사람임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정신이 계승되어 동학혁명, 광주 학생독립운동, 5·18민중항쟁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나는 5·18 당시 5·18민중항쟁에 참여하면서 이 싸움이야말로 딱 들어맞는 제목이 ‘5·18광주의거’이고 이 호칭으로 바로 그때의 기록을 남겼다. ‘광주의거’이자 ‘시민항쟁’이 바로 5·18이었다는 것이 지금이야 보물 무서사이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표현이었다.

의병이란 난을 구하고 폭도들을 주벌하는 것이므로, 중무장한 계엄군이라는 폭도들이 양민을 학살할 때, 그들을 주벌하려고 총칼로 싸운 시민항쟁이 ‘의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왜놈들을 죽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기삼연의 의병정신에서 광주시 민항쟁도 연유했다면 역시 광주는 의항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社說

농어촌 태풍 피해 극심 신속한 복구 지원을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태풍 ‘링링’이 광주·전남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수확기를 앞둔 벼가 쓰러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고 양식 시설과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수산 피해가 잇따라 추석을 코앞에 둔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태풍 ‘링링’은 그제 아침 목포 서쪽 약 140km 해상을 시속 44km로 지나면서 신안 흑산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4.4m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신안 가거도항에는 52.5m, 진도 서거차도에도 40.7m의 강풍이 몰아쳤다. 이로 인해 가거도항의 옹벽 50여m가 유실됐는가 하면 목포·진도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지고 도로 유실과 주택 파손 등도 속출했다. 광주·전남 1만 7000여 세대에서는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농작물과 어업 시설 피해도 잇따라 해남·강진·나주·영암·장성 등에서 벼 3849

ha가 쓰러졌고, 나주 배 농가(465ha)를 비롯해 영암·보성·신안·구례(1160ha)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해남·무안 등지의 비닐하우스(7ha)와 흑산도 등의 전복·우럭 양식 시설도 무참히 부서졌다. 전남도는 오는 17일까지 피해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주와 순천의 배 재배 농가는 지난 4월 이상저온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겹쳐 큰 타격을 입었다. 농가당 많게는 절반에 이르는 배가 떨어져 나갔는데, 최근 계속된 가을장마로 수확 시기를 놓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행정 당국은 이러한 농어민들의 아픔을 감안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그 실태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응급 복구에 나서야 한다. 또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어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올 추석에도 제수용품 구입은 전통시장에서

추석이 4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추석이 다가오면 늘 주부들의 걱정이 시작된다. 제수용품 준비에 드는 돈도 여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 추석 제수용품 가격 조사가 발표되는 것 또한 주부들의 이런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함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에 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가격이 오를 가운데 그나마 전통시장의 가격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석제수용품 1차 조사결과(4인 기준 평균)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29만1555원으로 7.9% 상승했고 백화점은 42만6390원으로 1.8% 상승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3.8% 하락해 19만5190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서 같은 품목의 제수용품을 샀을 때 백화점에 비해 23만12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9개 지역에서 조사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을 봐도 전통시장은 22만8632원, 대형유통업체는 31만5905원으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YWCA가 발표한 ‘광주 지역 추석 물가 조사’도 마찬가지다. 지역 백화점에서 구매할 경우 24만5757원이 소요되는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18만1960원, 전통시장에서는 13만6997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YWCA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 지역 매장 14곳에서 22개 품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광주 YWCA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제품은 품질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두 배에 가까운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뿐만이 아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도 도울 수 있다. 기왕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법조칼럼

법과 판결, 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단상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일본의 강제 동원에 따른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벌써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이 수출 규제의 ‘부도덕한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법과 판결의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법과 도덕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견해와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견해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명제들이 관점에 따라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오죽했으면 법철학자 레링이 법과 도덕의 구별하기 곤란함을 수많은 배들을 충돌·침몰하게 한 남미의 최첨단 희망봉에 비유했겠는가.

한편 규범인 법과 도덕은 사실인 정치와 분명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규정하고 형성한

다는 점에서 교차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규범이 바람직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정치가 도덕성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는, 법과 도덕의 구별 난이도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법과 그에 근거를 둔 판결을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여 부인하는 것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 국가 사이의 청구권협정만으로, 개인의 명시적·개별적 위임도 없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을 포기시키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면책해 준다는 내용으로 협정 자체가 무효다. 일본 강경파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한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이므로,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개인 청구권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가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이유는, 히데오시가 열도 통일 후 대륙 정벌에 나선 것과 같이, 일본이 겪는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아울러 그 위

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내 여론 조사가 의하면, 아베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도가 상승했다고 하니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은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의 내부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실패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원자재를 국산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수입을 다변화하면 일본 기업은 새로운 수요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정부는 도덕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단에 근거를 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자유 무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분업 구조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고. 그리하여 아베 정부는 거짓말로 변명을 일삼고 전범 국가가 마땅히 하여야 할 반성도 하지 않는 군국주의 이미지에 더하여, 국가 간 분업 체제를 흔드는 원흉으로 국제 사회에서 불신과 경멸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와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36년간 지배를 당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일본을 뛰어 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마침내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일본에 위기 의식과 견제 심리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이번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한편 아베 정부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고, 우리 국민은 이번 일본 제품 불매 및 여행 거부 운동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등의 불만 표출은 인권, 그리고 법과 판결의 도덕성을 무시하지 않는 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아베 정부가 천문학적 규모의 로비 자금을 전 세계에 살포하더라도 군국주의적 관점에서 침략 행위를 반성케 할 수 없다면 반인도적 침략 사실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왜곡·날조하는 한, 국제 사회에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법과 판결의 도덕성과 정치적 도덕성을 확보하여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부도덕하고 정치공학적으로 행동하는 일본을 결국 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여파처럼 광범위한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법과 판결의 도덕성은 공동체에 일정 범위 내에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부도덕한 내용의 법과 판결을 삼가야 하는 이유다.

기고

중국의 천년 프로젝트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작년은 전라도 천년이 되는 해였다. 1018년 고려시대 현종 임금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 천년의 세월을 넘어선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만든 현종도 ‘전라도’라는 말이 천년을 넘어서까지 사용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흔히 사용하지만, ‘천년지대계’라는 말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중국은 현재 수도인 베이징이 너무 비대해지고 환경이 열악해져서 도시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자, 제2 수도 건설의 도시를 베이징에서 100km 떨어진 허베이(河北)성 송안(雄安)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구상을 시작해서 2017년에 국무원에서 결정했으니 본격적인 출발은 3년쯤 된 셈이다. 2019년

9월 개통 예정인 신공항,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고속철도는 베이징에서 송안까지 30분에 불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베이징, 텐진과 연결되는 도로 등도 건설 중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 작업과 시민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건물들도 현재 건설 중이다. 면적은 처음에는 100㎢로 출발하여 중기에는 200㎢, 최종 목표는 2000㎢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략 천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국가급 혁신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 지능, 자율 주행차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과학 기술을 도시 건설과 결합하는 모델로 건설할 예정이고, 베이징 증권관의 IT관련 기업을 위시하여 상당수의 과학 기술 관련 기업들이 이주할 예정이다.

송안 건설 작업과 관련하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했던 말의 요지를 기억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역사에서 천년 프로젝트가 세 개 있었다. 첫 번째는 두장엔(都江堰), 두 번째는 만리장성, 세 번째는 장항(京杭) 대운하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네 번째 천년 프로젝트가 시작했는데, 바로 송안 신도시 건설이다.”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두장엔은 쓰촨(四川)성 청두(成

都)시에 있는 홍수 방지와 관개 용수를 저장하는 댐으로, 전국시대인 기원전 256년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8년 만에 완공하였다. 현재까지도 쓰촨본지의 평원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니, 이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셈이다. 만리장성은 약히 알려져 있다.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경항 대운하는 수나라 때 항저우에서 뤼양(瀋陽)까지 개통했고, 원나라 때 베이징까지 개통했지만, 최초는 춘추시대 오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하기 위해 운하를 파기 시작했으므로, 이때부터 계산하면 대략 2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도 남북의 주요 물자가 이동하는 운하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며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지만, 그 당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건설했던 사람들도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오래도록 생명력을 지니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출발 당시부터 천년을 내다보며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고, 그 필요성에 근거하여 당시의 최고의 수준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인 송안 프로젝트는 과거와는 다르게 실제로 천년 이상을 구상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인류가 두 번째 밀레니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경험에 근거하여 현 중국 최고의 지혜를 결합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최대한의 물자를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은 ‘천년대계’를 구상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중국의 천년 프로젝트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나주 혁신도시는 과연 천년의 구상을 품고 있을까? 광주는? 다른 도시들은?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겨난다. 광주의 한 기업인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광주의 정책은 4년마다 바뀌니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 지속성이 없으니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죠.” 천년은 고사하고 4년마다 바뀌는 정책이리나.

정책 입안자나 리더의 의지나 욕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절실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고의 수준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의 천년 프로젝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無等鼓

같다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같음에서 생겨나는 강력한 에너지가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당-정·청이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얼마 전 끝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현재 시행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의 공정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선 교육 현장에선 학생이 부유층과 권력층 자녀의 사회적 추락을 방지하는 ‘유리 바닥’(glass floor) 같은 현상이 자부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지난 2016년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에 처음 등장한 용어 ‘유리 바닥’은 상류층 인사들이 자신과 자녀의 경제·사회적 신분의 하락을 막기 위해 만든 ‘신분 추락 방지 장치’를 말한다. 사회적 약자의 신분 상승을 막는 무형의 장벽을 뜻하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과는 반대 개념이다.

부와 권력을 갖춘 상류층 인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 자신과 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유리 바닥을 만든다. 최근의 대입 제

도 개선 논의 역시 ‘학생이 일부 부유층과 권력층 자녀의 진학에 유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유리 바닥이 결국엔 사회 전체의 갈등과 대결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영국 출신의 미국 사상가 리처드 리브스는 최근 발간한 책 ‘20 VS 80의 사회’에서 “중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갇아 주는 이 유리 바닥이 세대를 거쳐 계급 간의 분리를 영속시키고 불평등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유리 바닥이 자부주의 국가에서 반전이 쉽지 않을 만큼 일반화했다고 분석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상류층이) 나의 지위는 학력과 돈·노력 등 나의 능력 덕분이어서 마땅히 나의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리 바닥을 둘러싼 불만이 폭죽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번뇌가 깊어야 해탈도 크다’는 불가(佛家)의 이야기처럼, 뜨겁고 격렬한 논쟁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 제도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졌으면 한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